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청년정책을 위하여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에 대한 철학적 제언 -

김 현(Kim Hyun)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hegelian015@daum.net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의 국회통과 이후 국가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주도한 컨트롤타워가 형성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구분되는 등 청년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일자리 중심에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광주시에서도 시청 및 각 구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유기적 역할분담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또한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으로부터 방향을 선회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되, 세대교체를 담보하는 청년정책의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키워드: 청년기본법, 세대담론, 청년도시 광주, 프레카리아트, 세대교체

1. 들어가는 말

-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이란
 - IMF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8년 ‘청년고용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대학 졸업 후에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특정 연령층의 장기 미취업과 불안정 고용,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사회병리적 징후 등을 ‘청년층’의 문제 또는 ‘청년문제’로 바라보는 ‘세대담론’이 등장하게 됨.
 - ‘청년문제’는 사회 내 특정 연령층이 겪는 불안정 고용 및 장기 실업문제와 동일하게 인식되어 왔으나, 이후 청년들의 빈곤·주거·건강·부채·등록금 등등 청년층이 처해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특정한 세대 내에서 나타나는 청년 문제라고 지칭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청년기본법은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청년종합복지대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청년기본법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청년정책 연계성 확보 △통합적 전달체계를 주요 골자로 내세우고 있음. 특히 청년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재정지원)와 지방자치단체(지역적 특성을 살린 서비스 지원정책)의 역할을 분담하고,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피동적인 정책대상자 또는 수혜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능동적 정책설계자로 전환하는 시각을 명료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관련 법안들과 차별화되어 있음.¹⁾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향후 시행될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상응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다각도의 모색과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더 나아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 또는 청년창업지원과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적 처방만으로는 청년세대들에게 더 이상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는 성찰적 시각이 요구됨. 다시 말해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대대적인 사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청년도시’ 광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도시’ 광주로?
 -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취임 후,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

1) 김하중,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02.17./매일노동뉴스, “[8월 시행 앞둔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일자리 넘어 종합복지로 빠르게 전환될 것”, 2020.02.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55>(검색일: 2020.05.04.).

정책전담부서를 만들어 ‘청년문제’에 대해 선도적인 대응을 해 왔으며, 같은 해 「청년정책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청년정책을 실시해 왔음.

- 또한 「청년정책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작성된 『2017~2021년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당당한 광주청년, 활력 넘치는 청년 광주”²⁾를 청년도시 광주의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광주를 “청년이 시민적 주체로서 자유와 권리를 공평하게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정부의 청년정책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도시”(『청년정책기본계획』로 조성하고, “청년도시가 청년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시민적 주체로서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도시”(『청년정책기본계획』)임을 천명하면서 청년도시 광주의 포부를 밝힌 바 있음.
-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광주광역시가 보여주었던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청년인구의 지속적 유출, 청년노동시장 및 노동조건의 악화로 인한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및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³⁾. 특히 <민선6기>동안 추진되었던 청년정책이 청년정책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시정의 홍보와 행정 전시주의를 위해 ‘청년’을 수단화하는 ‘청년팔이’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⁴⁾
-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7기>의 청년정책 또한 지역 언론으로부터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체계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⁵⁾, 일자리 창출과 창업 독려에 정책의 상당부분을 할애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업대책에 국한된 퇴행적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임.⁶⁾ 간단히 말해 현재 광주시의 청년정책은 ‘청년도시 광주’로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광주로 방향을 선회하여, ‘청년정책=실업대책’으로 간주했던 2000년대 중·후반의 청년정책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지적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광주시의 비전과 목적,

2) 광주광역시, 『2017~2021년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기본계획』, 136쪽. 이하에서는 『청년정책기본계획』으로 약칭하여 본문에 쪽수와 함께 표기함.

3) 광주광역시,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 실현 민선7기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3쪽, 19쪽 참조.

4) 참여자치 21 보도자료, 「광주시는 ‘청년사업 예산 부풀리기’ 꼼수를 중단하라」, 2016.10.05.

5) 국민일보, “광주시 청년정책 헛돌아...전국 최초 전담부서 빛 바래”, 2019.03.18.<http://m.kmib.co.kr/view.asp?arcid=0013152867>(검색일: 2020.05.04.)

6) 노컷뉴스, “참여자치21, 민선7기 1년차 광주시정 ‘부정’평가”, 2019.06.25./광주드림, “광주청년인구유출 속, 광주시 청년정책 유감”, 2018.04.18.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486985&ref_url=https%3A%2F%2Fwww.google.co.kr%2F(검색일: 2020.05.04.)

목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일자리 또는 창업정책’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청년정책’을 지역사회에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포괄적·수평적·민주적 의사소통 체계에 기반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채널을 구축·가동함으로써 다음 세대 광주를 위한 세대교체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2. <민선6기 청년정책>과 <민선7기 청년정책> : 발전인가, 퇴행인가?

- 현 <민선 7기> 청년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적 및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민선6기> 청년 정책의 공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는 <민선6기>에 광주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며, <민선7기>의 청년정책이 <민선6기>의 청년정책과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을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및 지속적 발전 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임.

1) 민선6기 청년정책 : ‘청년도시 광주’의 브랜드화

- 민선6기 청년정책에 대한 지속적 비판
 - 광주 참여자치 21 내 분과위원회인 청년위원회가 「2016년 광주시 청년정책 평가와 발전 방안」(이하 「발전방안」으로 약칭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민선6기>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의하면, 2015년부터 추진된 광주시 청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①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청년위원회’를 구성, ‘청년정책기본조례’를 발의하는 등 청년대책을 자신의 핵심 시정과제로 선정함. 그러나 「발전방안」에 의하면, ‘청년정책기본조례’에 의거,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년정책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적 의사소통의 구조가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아 왔음.
 - ② **민주적 의사소통구조의 부재:** <민선6기> 당시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

7) 참여자치 21, “민선6기 1년차 광주광역시 시정평가자료집”, <http://kcm.or.kr/24490>(검색일: 2020.05.04)

와 광주시 청년정책의 주요의사결정체제인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청년기구인 ‘청년위원회’와 중간조직인 ‘청년센터’ 간 정례화된 회의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청년정책이 원칙없이 표류한다는 비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 ③ **정책의 우선순위 부재로 인한 일회성 전시행정용 청년정책의 남발** : 청년기구인 청년위원회에 의해 광주시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대책과 선별적 대책을 구분하라는 일관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동안 이와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청년을 위한 행사와 사업 위주의 정책들이 남발됨으로써 윤장현 시장의 일회성 전시행정에 청년을 동원한다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④ **<민선6기>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의 유명무실화** : 청년인재육성과와 그 외 청년단체와 조직들 간에 정례화된 회의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청년정책담당부서가 타부서와의 관계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⑤ **내용없는 ‘청년도시 광주’ 브랜드화 사업** : 청년정책에 관한 체계성, 일관성, 전망과 비전을 정확하게 설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축제’, ‘청년도시 컨퍼런스’ 등을 포함한 ‘청년도시 광주’ 브랜드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선6기>가 ‘청년’이라는 이름을 시정홍보와 실적쌓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민선6기>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민간차원의 자율적 청년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6년 당시 광주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전망과 관련하여 ▲ 민관협력을 통한 ‘광주청년권리현장’ 발표, ▲ 광주시의회 내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제 이행, ▲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조사와 지원대책 수립, ▲ 청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청년 배·수당제도 합의, ▲ 통합적인 청년공간의 확대 등을 광주시가 추구해야 할 핵심 청년 의제로 제시한 바 있음. 또한 참여자치21 청년위원회는 <민선6기> 청년정책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하여, ▲ 청년정책의 범위와 기준을 분명하게 정할 것, ▲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자생적 청년조직의 생성 및 활동 지원, ▲ 타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청년정책 관련 연구역량 강화, ▲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한 바 있음.

- 2016년 당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참여자치 21> 내 분과위원회인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청년정책 수립의 원칙 및 원칙 실현을 위한 제안과 관련하여, 광주시 의회 내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재 가동 중이며, 청년복지를 위한 부채경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간조직인 ‘청년센터 숲’

을 통해 광주시 곳곳에 청년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 상당 부분 의견 수렴되어 현재 청년과 관련한 정책들로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2020년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당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었던 ‘보편적·포괄적 복지모델’로서의 사회보장형, 공공부조형 복지모델은 청년정책분야와 관련하여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의 청년정책은 여전히 ‘선별적·제한적 복지모델’에 입각해 구성되고 있는 실정임.

- 좋은 정책은 명확한 비전과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추어야 함. 우리보다 먼저 청년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채택하고 ‘사회적 통합’을 청년정책의 비전으로 채택한 유럽연합(EU)의 경우 1)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내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의 제공, 2) 능동적 시민주체로서 청년의 민주적 자치역량 강화라는 청년정책의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들을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목록화한 바 있음.⁸⁾ 정책의 기본요건에 비추어 볼 때, <민선6기>동안 추진되었던 청년정책은 중·장기적인 비전, 목적,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도시 광주’와 ‘청년도시 광주의 브랜드화’라는 공허한 슬로건을 내세운 것 외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

2) 민선7기 청년정책 : 과거로 퇴행하는 청년정책, 곧 일자리+창업정책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된 청년관련정책들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① 풍요로운 광주, ② 정의로운 광주, ③ 따뜻한 광주, ④ 품격있는 광주, ⑤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라는 다섯 가지 시정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정책 수단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을 내걸고 있음. <민선7기>의 공약총괄목록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 개수에 의거, 위 다섯가지 시정목표 중 광주시는 ‘풍요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정 운영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⁹⁾
 - 특기할 만한 사항은 <민선7기> 공약집에는 청년정책 분야가 하나의 독립적 범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각 시정목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

8) 이뉴스투데이, “참여자치21-광주시의회, 청년정책토론회 개최”,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35>(검색일: 2020.05.04.) 자료집.

9) 광주광역시,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참조. 해당 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는 위 5대 시정목표 아래 전체 14대 핵심공약을 세분화하고, 그 이하 72개의 실천과제와 223개의 세부과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과제 중 일자리 관련 분야가 총 7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wangju.go.kr/gjmayor/contentsView.do?pagelD=gjmayor11>(검색일: 2020.05.04.) 참조.

어 청년일자리 문제는 풍요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 범주 아래 다른 과제들과 나란히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전통시장에서 청년상인육성”, “지역대학에 4차산업전문교육과정설치” 등등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의 민주적 자치역량 강화 및 수평적, 민주적 의사소통체계화의 문제 역시 일자리 분야 내 “정책형성과정에 청년참여시스템구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세 번째 시정 목표 ‘따뜻한 광주’에는 청년복지 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항목이나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더 나아가 <민선6기> 청년정책의 핵심담당부서역할을 해왔던 ‘청년정책과’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능동적 체계적 대응이라는 목적에 따라 2019년 11월에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국으로 통합, 독자적인 청년정책에서 아동·여성·청소년·청년의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이라는 대범주 아래 분류되어 있으나, 청년관련 사업들은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청년부채, 등록금 등 청년층이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성격에 따라 시청의 개별부서에서 수행하는 하위분야로 분류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 제공 2019년 7월 10일 기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총 44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¹⁰⁾

표 1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온라인 청년센터)

대분류	중분류	정책명
취업지원형 정책 (20개)	교육훈련, 체험,인턴	워킹맘 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GTEP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청년JOB 희망팩토리 사업, 청년건강검진,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청년13(일+삶)통장 드림사업, 청년 마음건강 상담소
	전문분야 취업지원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청년 체육 인재 육성, 예비 청소년지도자 발굴·육성, 광주청년 금융복지지원 (청년드림은행),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 운영
	해외진출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

10)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List.do>(검색일: 2020.05.03.).

창업지원형 정책 (5개)	경영지원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job) 카페 운영,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
	자본금 지원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주거금융 정책 (6개)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비엔날레 인력 양성 사업,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2019 청년교통수당드림
	주거 지원	남도학숙 운영 지원
	학자금 지원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생활·복지 정책 (13개)	건강	청년 정신건강 지원(마인드링크),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청년 자립능력향상 교육, 청년취업 광주나래(정장대여 등) 서비스,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	2019 세계청년축제 개최(2019 World Youth Festival),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사업, 청년예술인지원센터운영, 시설폐소 청년 자립기반지원 연구용역, 광주청년위원회 운영(제5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알바지킴이 노동법률상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정책 실험실

■ ‘일자리+창업’ 일변도의 민선7기 청년정책

- 위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관련정책 44개 목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취업지원과 창업지원을 포괄하는 25개의 일자리 창출분야이며, 청년을 위한 복지분야는 생활복지분야 내 5개와 주거금융정책 6개까지 포함 총 11개 정도에 불과함. 이는 <민선7기> 출범당시부터 현재까지 광주시가 청년정책을 실업대책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정책으로만 이해해 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때문에 참여자치 21 청년위원회가 작성한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서」는 이용섭표 청년정책을 “행정의 필요에 따라 구색맞추기 식”으로 추가된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음.¹¹⁾
- 광주시는 역대 최대규모라는 평가를 받는 5조 7120억 원을 2020년 예산으로 편성, 이 가운데 580억 원을 청년일자리 창출분야로, 또한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자존감 회복과 자립촉진을 위한 광주청년드림수당에 32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해오던 청년예산분야를 대폭 늘리기는 했으나, 청년복지분야 사업비는 전체 예산규

11) 참여자치 21,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참조.

모 내에서 여전히 미미한 정도에 머물러 있음.

- 또한,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은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광주지역의 창업 양 대비 질적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해당 문건은 특히 광주시가 기존기업 대비 창업기업의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창업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창업안전망 구축, 신생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성장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¹²⁾
- 그러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으로 지원한 325개 청년기업 가운데, 79%가 2년 안에 폐업하고,¹³⁾ 창업의 유형 또한 기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 중 압도적으로 후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¹⁴⁾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어떤 이유에서 가장 많이 희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창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 또한 청년들의 실제 희망사항과 정확하게 매칭될 필요가 있음. 실례로 2017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업 중 1, 2순위는 대기업과 정부공공기관 근무가 차지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을 2008년 8.1%에서 2015년 3.6%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¹⁵⁾ 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서 창업이 차지하는 비율 및 창업지원에 책정된 예산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민선6기>와 <민선7기>의 청년정책-청년세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전시용 청년 정책들의 묶음

- 청년문제 = 종합적 삶의 문제
 - ‘청년도시’를 표방한 <민선6기>의 청년정책들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과제

12) 광주광역시,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 실현 민선7기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7~8쪽 참조.

13) 노컷뉴스, “광주 청년기업 79%, 창업 2년 안에 폐업”, 2017년 11월 7일자.

14) 신동아, “생계형 청년창업 현주소”, 2018년 5월 6일자. 창업은 크게 기술형 창업,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된다. 기술형 창업은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모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생계형 창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집중된 창업형태로 63%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며 특히 생존율이 낮다는 것이 한계인데, 실제 20대 창업의 3년 생존율은 26%로 다른 세대의 창업 생존율보다 낮다. 생계형 창업은 대형업체의 전횡, 경쟁업체의 포화상태,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상황을 극복해야 생존할 수 있다. 한편, 창업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사업 지원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업가 10명 중 8~9명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5) 신종각·김준영·안준기·최기성·최강식·이지민, 『청년패널조사로 본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청년패널조사 10주년 특별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7. 12. 62쪽 참조.

로 표방하는 <민선7기>의 청년정책들은 실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지, 또 지역의 안팎에서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수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더욱이 광주시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년의 문제를 현재 청년이 처한 삶의 상황을 실업과 경제난 만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문제 등 종합적인 삶의 문제로 확대해 인식”(25쪽)할 필요를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민선7기>의 청년관련 정책이 일자리와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선뜻 수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2020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향후 한국사회의 청년정책이 단순한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임을 지적,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인식과 청년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의 중요성을 법안 실행의 취지로 밝히면서,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청년발전”을 청년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는 있는 현재 상황은 광주시의 현 청년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성찰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선회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광주시청과 각 구청을 잇는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부재와 행정책임자와 시정의 상황에 따라 뒤바뀌는 청년정책
 -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와 각 구가 별도로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파편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선6기>부터 현 <민선7기> 전체 6년 동안 청년 또는 청년관련 정책들의 추진 내용 또한 정책적 일관성, 체계성, 뚜렷한 방향성과 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비전과 목적, 로드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민주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담보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의 청년들이,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청년정책을,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청년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3. 세대담론에 기반한 청년정책에서 ‘세대교체’를 위한 청년정책으로

1)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이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 ‘세대담론’을 거부하는 ‘청년담론’의 등장
 -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후 한국사회에 쏟아져 나온 다양한 세대담론들은 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세대범주로 묶어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평가절하하여, 정책의 시혜대상으로 청

년을 호명하거나, 신자유주의 이후 급부상한 자기관리와 자기경영의 주체로서 청년들을 호명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왔음. 즉 ‘청년=사회적 약자’ 또는 ‘청년=자기계발의 주체’라는 두 가지 등식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이해하는 주요한 개념적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 또한 청년에 대한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기준으로 수립되거나 실행되어 왔음.

- 최근에 등장한 청년담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담은 논의들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세대담론이 IMF 이후 본격화된 실업문제, 노동문제, 계급문제, 이로 인한 빈곤의 일반화 등등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할 뿐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청년문제란 결국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고용여건에 기초한 ‘실업문제’이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¹⁶⁾
-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청년이란, 한국사회의 경제적·계급적 적대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인 기호에 불과한 것으로서, ‘세대담론으로서의 청년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청년활동가들은, ‘청년’이라는 기호를 관통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교차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예컨대 ‘청년’이란 단지 특정연령의 집단을 묶는 인구학적 통계학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청년’이라는 기호를 관통하는 인종, 출신지, 젠더, 섹슈얼리티, 신체특성, 종교, 계층 또는 계급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주변화된 사회적 소수자들의 처지와 현실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¹⁷⁾
- 청년세대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청년담론의 재구성 요구를 주장하는 청년활동가들은, ‘청년’ 개념을 “특정 연령 코호트나 출생 코호트를 지칭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년세대’를 정의하자고 제안함과 동시에, 청년운동의 차원에서 ‘청년세대’라는 기호의 활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¹⁸⁾고 주장함.
- 동정적·시혜적 정책 대상 또는 자기계발의 주체에서 시민적 권리주체로서의 청년으로
 - 청년활동가들은, “청년문제를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노동시장 진입실패, 불안정 고용, 비인간적 노동조건,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정한 주거조건, 높은 등

16) 박이대승 외, 「‘청년’ 기호분석: ‘청년’이란 무엇인가?, 서울시 청년허브, 11~17쪽 참조. <https://youthhub.kr/wp-content/uploads/2016/04/청년담론연구보고서.pdf>(검색일: 2020.05.03.) 특히 이와 관련하여, 불안정 고용에 내던져진 청년세대들을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과 결부지어 풀어내고 있는 아미미야 가린, 김미정 옮김,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년의 노동』, 도서출판 미지북스: 2011 참조.

17) 김창인·전병찬·안태인, 『청년X현재사』, 시대의 창: 2019, 28쪽 참조./“청년세대 담론들은 청년당사자가 아닌 기성세대에 의해 주로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세대 담론은 학자, 정치가, 저널리스트, 대중지식인과 같은 문화매개자들을 통해 생산된다. 청년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청년세대 담론의 발화 주체가 되는 이 상황, 언론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는 청년담론이, 청년들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함과 동시에 세대담론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김선기, 『청년팔이 사회』, 오월의 봄: 2019, 219쪽, 227쪽.

18) 김선기, 『청년팔이 사회』, 233~234쪽 참조.

특금 등의 구체적 경제상황에 따라 20대, 30대의 인구집단을 재분류해야 한다”¹⁹⁾고 주장함.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청년’이라는 세대범주로 묶어 버리면, 오히려 그 대상의 구체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세부정책들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임.

- ‘청년’이라는 기호를 관통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 하나하나에 주목하지 않고, 세대담론을 전제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청년들은 여전히 청년들이 거부하는 ‘청년이즘’에 고착되어, 청년을 정책적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평가 절하하거나, 청년창업의 권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자기계발, 자기경영을 수행해야 할 신자유주의적 인간으로 대상화할 위험성이 농후함.
- 따라서 정책적 수혜 대상자로서 청년을 설정해두고, 청년들을 위한 시혜적 정책들을 수립하거나, 또는 일자리와 창업을 청년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기존의 청년정책들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청년에 대한 새로운 사유패러다임과 담론에 적합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모색해야 함.
- ‘청년’이라는 기호를 관통하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 및 계급적 불평등은 특히 오늘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계급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제임. 이 개념을 처음으로 공론장에 기입한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에 의하면, ‘프레카리아트란 자신이 노동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고 삶에 대해 기회주의적이면서 불확실한 전망 이상을 가질 수 없는 자들’로서, 시민권, 문화권, 사회권, 경제권, 정치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을 총칭²⁰⁾하는 개념을 의미함. 따라서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은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던 시민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일종의 ‘거류민층’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이 스탠딩의 주장임.
-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청년활동가들 상당수는 청년문제를 한국사회의 불안정고용, 열악한 노동조건, 성 또는 인종 차별, 계급적 불균등, 기회의 불균등과 같은 근본적 문제와 결부시켜 논의해야 하며,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역시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별도로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음.
- 따라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 또한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출생 코호트를 설정해 두고, 이들을 위한(for)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기존의 청년정책 패러다임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프레카리아트로서의 청년들이 시민적 권리주체로서 동등한 발언

19) 박이대승 외, 『‘청년’ 기호분석: ‘청년’이란 무엇인가?』, 서울시 청년허브, 53쪽 참조. <https://youthhub.kr/wp-content/uploads/2016/04/청년담론연구보고서.pdf>(검색일: 2020.05.03.)

20) 가이 스탠딩, 김태호 옮김,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박종철출판사: 2011, 36쪽 참조.

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공간의 창출과 확장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따라서 '1)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청년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과감하게 벗어나, 이들을 시민사회의 동등한 권리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해야만 하며, 2) 시민권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 청년들의 사회권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3) 시민적 권리주체 및 사회권 보장을 위해 20대와 30대 연령집단을 '교차적 관점'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²¹⁾

- 결국,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궁극적 비전과 목적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성을 담보한, 청년이 이끄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음. 이는 특히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권리주장을 전개하며, 시민사회의 구성원들과 청년도시 광주를 두고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을 필연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음.

2) 청년성을 담보한 또 하나의 헤테로토피아, 광주는 가능할까?

- 도시생활의 규범적 이상 4가지 : 배제없는 사회적 차이, 다양성, 에로티시즘, 공공성²²⁾
 - 다윈주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an Young)은 동질적 집단을 강제하거나 전제하는 공동체의 이상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 면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것으로 정의된 도시 생활의 이상”²³⁾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배제없는 사회적 차이’, ‘다양성’, ‘에로티시즘’, ‘공공성’이라는 네 가지 덕목으로 요약됨. 영에 의하면,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는 도시구성원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전적인 타자성이 지배하는 것도 아닌 특수적 차이를 포용하는 <배제없는 사회적 차이>, 도시공간의 다양한 용도분화를 통해 도시공간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행사 활동들이 넘쳐나는 <다양성>, 낯설고 이질적인 주체들의 상시적 만남을 보장하는 <도시적 개방성과 에로티시즘>,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민주적 소통광장과 포럼이 도시 곳곳에 포진해 있는 <공공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지님.

21) 박이대승 외, 「'청년' 기호분석: '청년'이란 무엇인가?」, 서울시 청년허브, 54쪽 참조. <https://youthhub.kr/wp-content/uploads/2016/04/청년담론연구보고서.pdf>(검색일: 2020.05.03.)

22) 아이리스 매리언 영, 조국 옮김,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502~507쪽 참조.

23)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501쪽.

- 차이, 다양성, 에로티시즘, 공공성을 담보한 청년도시 광주로.
 -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서 젊은 도시 광주를 현실적으로 조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오늘날 청년들이 가진 다양성과 이질성의 욕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이라는 기호 안에서 작동하는 젠더, 계급, 인종, 지역과 같은 다양한 변항들을 함께 사고함으로써, '청년'이라는 기호 속에 포함된 다양한 이질적 욕구들에 주목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만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문제를 사회적 소수자 문제로 인식하고, 이로부터 젠더, 신체적 조건, 소득수준, 학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적 권리보장을 광주시 청년관련 정책의 비전과 전망으로 삼아야 함. 즉 청년문제를 국가, 도시, 특정 지역 내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 및 사회적 차별에 맞서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위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 볼 때, 청년정책의 수립 및 방향과 관련해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청년=사회적 약자'라는 등식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청년의 정치참여공간을 폭넓게 보장하는 시민운동의 장을 확장하고, 젊은 청년들의 시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민주적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함. 즉 청년정책의 지향점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청년들에게 '권리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장의 활성화에 두어져야 함.

- '광주'를 바라보는 젊은 시각의 수용과 확산 : 세대교체! 광주!
 - 2030세대 청년들은 젊은 광주를 광주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나 내러티브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담론의 생성으로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함. 예를 들어 최근 20~30대 광주 안팎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518 광주가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기억으로 떠올려지거나 고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는가 하면,²⁴⁾ 다양한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충분히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도시성의 지향을 광주의 이상적 비전으로 제안하기도 함. 또한 한국의 시민성을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라인으로서 광주가 거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기도 함. 요컨대 광주의 청년들 또는 광주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광주에 대한 다양한 내러티브의 생산을 통해 광주에 대한

24) 오지윤 권혜상, 『요즘 광주 생각』, 꿈지락: 2020, 32쪽.

정형화된 이미지를 쇄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²⁵⁾ 기성세대가 주도해온 광주담론과 분명한 차이점 및 변곡점 마련을 갈망하고 있음.

- ‘청년’기호에 내재된 이질성과 교차성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도시조성 및 청년들의 실제 삶에 밀착된 정책들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기호 속에 내재된 이질성과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취업-결혼-출산’이라는 정형화된 삶의 양태가 청년들 모두가 희망하는 삶의 방식이 아님.
- ‘청년’이라는 기호를 읽는 한 가지 키워드인 교차성이 오늘날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고질적인 병폐와 근본문제를 적시한다면, 다른 하나의 키워드인 ‘이질성’은 지금까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 요컨대 실험적인 삶의 방식을 지칭함. 나는 이것을 푸코를 따라 또 하나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고 부르고자 함. 이는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삶의 루트를 과감하게 벗어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실험적인 태도와 관점을 의미함.

5. 세대교체 정책으로서 광주시 청년정책을 위한 제언들

-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는 그 역사적인 저력에 기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을 두고 가장 활발하고 과감하게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광주의 청년정책은 당연히 이런 청년들의 삶의 욕구를 독려하고 장려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자율적 의사표현,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담론의 장이 광주 곳곳에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차원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청년 모임, 청년과 관련한 담론 연구 및 생산 모임 등이 양적, 질적으로 풍부해져야 함. 이러한 문제의식으

25) 오지윤, 권혜상, 『요즘 광주 생각』에 나타난, 광주에 대해 청년들의 특기할 만한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광주의 이미지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44쪽, “광주가 고향인 사람으로서 518이 네거티브하고 어두운 이미지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 폭압당했다는 수동적 해석 말고, 시민중심의 운동이었다는 능동적 해석도 필요한 시점이다.”, 78쪽, “518과 관련된 세대 간의 생각 차이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 79쪽, “광주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던 아버지 세대와 그 결과 속에서 20대를 보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다.”, 78쪽, “광주에 대한 콘텐츠는 자기검열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자기검열이 없는 다양한 내려티브가 있었으면 한다.”, 89쪽, “518민주화 운동은 더 이상 지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많은 논쟁 끝에 승인받은 역사다. 그래서 젊은 층의 지지를 구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로 해석해야 하는 단계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모두가 똘똘 뭉치기보다는, 다양한 이미지로 뿔어나갈 수 있는 시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108~109쪽, “광주의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필요하다”, 115쪽, “한국의 시민성을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라인으로 ‘광주’가 거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167쪽, “광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내부의 비균질적인 움직임이나 운동들도 조명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66쪽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언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 발언들을 살펴보면, 20~30대 청년들은 광주를 기성세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또는 기성세대의 방식과는 단절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도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엿보인다.

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정책적 제언

- 서울시 청년허브가 작성한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지원아카이브』에 의하면, “청년, 노년처럼 이익이나 의견을 매개로 하여 조직되지 않는 세대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는 공적주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민간주체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조언함.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전망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주시의 민관거버넌스 체계가, 혹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이익들의 초대”²⁶⁾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조직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 숲, 청년위원회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추상적 청년’이 아닌 ‘실체적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걸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함.
- 청년기본법 통과로 인해 향후 국가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주도한 컨트롤타워가 형성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구분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광주시에서도 시청, 각 구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시단위와 구단위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명확하게 분담되어야 함. 또한 청년정책과 관련한 장기적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이를 위한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되, 정책 효능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민선7기>는 ‘광주다움’의 회복을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광주다움을 의향, 예향, 미향으로 범주화하고 있지만, ‘광주다움’이란 정태적으로 고정된 객관적 실체도 아니며, 몇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이미 확인된 대상도 아님. ‘광주다움’이란 서로 다른 이질적 주체로서 광주의 시민들이 민주적 담론을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과정적 개념임. 정책수단으로서의 ‘광주다움’의 회복을 위해서는 더욱이 몇 가지 유형이나 몇 가지 사건들로 고착된 광주다움의 틀을 벗어나 이를 새로운 담론의 장으로 끌고 갈 2030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민주적 자치역량 강화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내 청년이 이끄는 다양한 연구공간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청년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연구와 교육 풍토 정착에 주력해야 함. 따라서 현행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청년창업지원사업 중심의 광주시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청년교육, 청년연구, 청년교류, 청년문화 사업 등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

26)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의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지원아카이브』, 미래상상: 2018, 12~14쪽 참조.